건설시장

공공 SOC 물량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 심화

■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공공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대형건설사들도 그 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소규모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수주에서도 수주에 초점을 맞춘 투찰전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공공사 수주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것

주요내용

현황

– 최근 K-water가 마감한 종심제 공사 2건(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제4공구, 제2공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각각 22개, 36개 건설사가 참여

– 동 공사는 400억~500억원대 소규모 종심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주요 대형건설사 대부분이 PQ서류를 접수해 이들 대형사들이 그동안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만 참여해왔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를 보임

– 특히 지난 9월14일 개찰한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추정금액 1759억원)에서 현대건설은 저가 1순위로 투찰했고, GS건설은 저가 3순위(81.028%), 포스코건설은 저가 7순위(81.209%)로 투찰하는 공격적인 투찰전략을 보여, 지난 7월 개찰한 별내선 1공구에선 모두 22개 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대건설은 저가 21번째, GS건설은 저가 16번째로 투찰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

– 이 같은 대형사들의 수주행보는 내년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 공공공사 수주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을 예고

향후 전망

– 내년 SOC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예정된 SOC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간 수주경쟁이 한해 실적을 좌우할 전망

– 연내 예정된 주요 공사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9개 공구)',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11개 공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4개 공구)',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시화MTV구간 및 시화JCT 건설공사' 등을 남겨두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1410억7000만원)와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1623억7753만4395원)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3·5공구' 등을 예정하고 있음



연말까지 예정된 주요 SOC 발주물량

(단위 : 억원)

순번	건설공사명	공사금액	입찰방법
1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514	종합심사낙찰제
2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1공구	2171	
3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2공구	1801	
4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4공구	2009	
5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5공구	2018	순수내역입찰
6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6공구	2195	종합심사낙찰제
7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7공구	2213	
8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8공구	2113	
9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9공구	2166	실시설계 기술제안
10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10공구	2262	종합심사낙찰제
1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11공구	2318	실시설계 기술제안
12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간 건설공사 제12공구	1852	종합심사낙찰제
13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2643	
14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	2514	
15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3764	
16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	2659	
17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3265	
18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6공구	2937	
19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7공구	3171	
20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8공구	2905	
21	세종~포천(안성~구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2549	
22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1663	종합심사낙찰제
23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	3440	턴키
24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1563	종합심사낙찰제
25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	1503	
26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1470	순수내역입찰
27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6공구	2133	실시설계 기술제안
28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8공구	1886	
29	시화MTV구간 및 시화JCT 건설공사	1067	종합심사낙찰제
30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	1411	
31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	1624	
32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053	
33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1129	
34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630	
35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1570	
36	매리~양산 도로 건설공사	2297	종합평가낙찰제
37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공사		

2017년도 재정집행 관리대상 SOC 집행실적 저조

■ 9월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 '월간 재정동향 9월호' 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20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7조원 가운데 7월말까지 연간계획 대비 64.9% 182.9조원이 집행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다만, SOC투자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예산집행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집행 지연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불용예산을 발생시켜 내년도 SOC 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 원인을 제공

주요내용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실적 현황

– 올해 7월말 기준 연말까지 집행이 예정된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원 중 64.9%인 182조9000억원의 집행이 완료

– 중앙부처의 경우 연간계획대비 65.8%를 집행한 반면, 공공기관은 계획 대비 60.5% 집행에 그쳐 중앙부처 대비 공공기관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

주요 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단위: 조원, %, 누계)

구 분	'17년					
	연간계획(A)	2/4계획	3/4계획	6월실적	7월실적(B)	집행률(B/A)
합계	**281.7**	**163.5**	**222.3**	**166.3**	**182.9**	**64.9**
○중앙부처	233.8	135.7	187.0	139.2	153.9	65.8
예산	192.7	112.9	154.8	116.2	127.5	66.2
기금	41.1	22.8	32.2	23.0	26.4	64.2
○공공기관	47.9	27.8	35.4	27.1	29.0	60.5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 정부는 재정집행관리 제도를 통해 ①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정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43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집행을 관리하고 있음

총지출 vs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17년 기준)

	총지출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계	–	**400.5조원**	–	**281.7조원**
예산(일반+특별회계)	중앙행정기관 53개(전체)	274.6조원	중앙행정기관 45개	192.7조원
기금	67개	125.9조원	43개	41.1조원
공공기관	–	–	33개	47.9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중앙부처(예산+기금)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중앙부처들은 올해 7월말 기준 연말까지 집행이 예정된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33조7877억원 중 65.8%인 153조8644억원이 집행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37조6,659억원 중 60.8%인 22조9,122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임

(단위: 억원, %, 누적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A)	2/4계획	3/4계획	6월실적	7월실적(B)	집행률(B/A)
○중앙부처계	2,337,877	1,357,033	1,869,567	1,392,399	1,538,644	65.8
– 국토교통부	376,659	206,066	292,229	207,014	229,122	60.8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 공공기관은 7월말 누계 기준 60.5%의 집행률을 보여 65.8%의 집행율을 보인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임
- 특히 SOC 관련 최대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은 각각 58%, 49.5%, 56.2%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여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입낙찰 절차 간소화 원칙까지 마련하며 조기집행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에 실패

(단위: 억원, %, 누적기준)

구 분	'17년					
	연간계획(A)	2/4계획	3/4계획	6월실적	7월실적(B)	집행률(B/A)
○공공기관계	479,071	277,827	353,842.3	270,790	289,988	60.5
한국토지주택공사	124,210	63,784	88,800	66,239	72,098	58.0
한국철도시설공단	92,642	55,775	62,001	43,803	45,883	49.5
한국전력공사	62,635	40,115	49,805	41,494	42,286	67.5
한국도로공사	35,419	18,595	24,793	18,832	19,916	56.2
한국농어촌공사	23,434	15,350	19,298	15,097	17,152	73.2
한국수력원자력	20,370	12,871	16,015	13,167	14,263	70.0
한국수자원공사	14,703	9,413	11,913	9,560	10,113	68.8
한국중부발전	10,564	7,231	8,861	7,329	7,947	75.2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시사점

- SOC 관련 재정 집행지연은 건설경기 위축과 불용예산을 발생시켜 내년도 SOC예산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발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예산 중 불용돼 내년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만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강남 재건축 단지에 후분양제 확산

■ 그동안 후분양 방식을 꺼려 왔던 건설사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시장 압력을 피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스스로 후분양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 강남 재건축 단지 후분양은 소비자 보다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되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후분양제 적용 단지가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지만,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주요내용

현황

– 그 동안 주택시장에서는 후분양을 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의 70% 정도인 계약금·중도금 없이 아파트 공사 대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고, 소비자도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집값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후분양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였음

– 그러나 지난 9월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의 재건축 시공사로 '후분양 제안'을 한 대우건설이 조합총회에서 총 180표 중 103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됨

– 대우건설은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원하는 시점으로 분양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제안한 점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자체 평가

–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받으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입찰에서도 두 업체 모두 '후분양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

후분양제 선택 배경

– 최근 분양보증 권한을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 4구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10월 말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정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에서 후분양제 적용 단지들이 발생

– 향후 가격상승 기대치가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선분양을 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발생하지만, 조합원 입장에

선분양 vs 후분양

구 분	선분양	후분양
분양시기	– 아파트 착공 시	– 재건축의 경우 공정률 80% 이상, 공공아파트 경우 60% 이상일 경우
장 점	–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 – 수요자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 시세차익 기대	– 실제 아파트를 보고 소비자들이 결정 – 분양 후 공사 중 건설사 부도위험 가능성 낮음 – 분양 후 입주시 까지 소요시간 단축
단 점	– 아파트 실물 없이 분양 선택 – 분양 후 공사 중 건설사 부도위험 – 분양 후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	– 금융비용의 분양가 전가 가능성 – 분양대금 마련 기간 촉박 – 자금조달 여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의 시장 이탈에 따른 공급 감소



선 분양 수입이 줄어 추가부담금(입주 때 추가로 내는 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주경쟁에 나선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양가 책정이 자유로운 후분양제를 제안

- 재건축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일반분양가를 선분양보다 높일 수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된 후 분양을 실시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향후 전망과 평가

-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사업성이 높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후분양 시 사업지 담보 대출 등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고 재무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사들의 참여가 높아 향후 후분양 검토 또는 도입 재건축 단지가 확산될 전망
- 특히 10월말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 아파트 일반분양가가 10% 이상 낮아져 조합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과 재무적 안전성이 높은 대형사가 주로 시공을 맡고 있는 서울 강남권 및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후분양이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집값 상승 여력이 낮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목돈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후분양제가 강북 재개발이나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 그동안 시장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후분양의 목적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논의되는 후분양은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일 뿐이란 평가

대형건설사들,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

■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 위축과 건설경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논란이 일어 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향후 주택시장 위축에 대비해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 물건을 수주하기 위해 대형사들이 사활을 걸고 수주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

주요내용

배경

-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8.2 부동산대책 등으로 국내 주택부문이 규제에 막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해외 사업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위기감과 내년 SOC 예산도 큰 폭 감소가 배경
- 특히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급공사보다 사업성이 높고, 분양 리스크도 적은 것으로 검증된 우량한 수주물량이라는 점에서 대형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인데다, 해당 기업의 지역 랜드마크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향후 다른 정비사업지 입찰시 포트폴리오로 유리한 조건 선점의 기회로 작용
- 또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형사간 컨소시엄 형성을 허용하지 않고 대형사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향후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남권 재건축 수주는 대형사들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대형사들은 사활을 걸고 수주경쟁에 나서고 있음

현황

- 올해 하반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서 시공사 선정 예정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총 14곳으로 공사비만, 7조원 수준으로 전망
- 추정 공사비 2조6411억원으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올해 재건축 최대 규모인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9월28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향후 강남권 주택시장의 주도권 경쟁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
-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동부건설, 효성 등 대형사들이 치열하게 수주경쟁을 진행 중임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예정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단위 : 억원)

구	동	단지	규모(호)	공사비(억원)	시공사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184	530	3차례 유찰 후 현대건설 단독입찰후 시공사 선정(8/26)
	대치동	쌍용2차	620		현대건설 Vs. 대림산업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5,748	26,411	현대건설 Vs. GS건설(9/28)
	잠원동	신반포4차	1,212	5,160	
	반포동	신반포13차	346	899	롯데건설 Vs. 효성(9/9)
	잠원동	신반포14차	279	719	롯데건설 Vs. 동부건설(9/9)
	반포동	신반포15차	673	2,089	대우건설 Vs. 롯데건설(9/9)
	잠원동	신반포22차	168	512	
	반포동	반포현대	108	261	
	잠원동	한신4지구	3,685	9,354	대우건설 Vs. 롯데건설(10/12)
	서초동	신동아	1,340	3,233	대림산업(8/27)
	방배동	방배5구역	2,557	7,492	3차례 유찰후 현대건설 단독입찰(9/9)
	방배동	방배13구역	2,296	5,753	GS건설 Vs. 롯데건설(9/2)
송파구	잠실동	미성, 크로바	1,888	4,700	GS건설 Vs. 롯데건설
	문정동	136일대 재건축	1,265	2,462	GS건설 Vs. 대림산업

자료 : 유진투자증권

부동산 신탁사 시행사업 미분양 사태

■ 최근 몇년간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하며 몸 집을 불려왔던 부동산신탁사들이 시행한 분양 사업지들에서 연이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신탁사들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는 평가



주요내용

현황

- 과거 분양관리만 대행하던 '관리형 토지신탁'에 그쳤던 부동산 신탁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에 접어든 2015년부터 사업 주체로 직접 나서며 '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방식의 형태로 사업 참여 확대
- 신탁사가 기획부터 인허가, 자금 조달,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시공사는 단순 도급 방식으로만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택 수요자들은 신탁사가 공급하는 단지는 안전하다고 인식해 통상적으로 청약 성적도 좋은 편이었음
-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 시장이 침체되며 신탁사들이 분양한 8개 사업지 중 6개가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상황이 급변
- 최근 하나자산신탁이 구(舊) 서울리조트 부지를 개발해 분양한 남양주의 '두산 알프하임'이 1순위 청약 결과 2821가구 모집에 1734건 청약, 2순위까지 추가 청약 건이 694건에 불과해 최종 경쟁률은 0.64대 1로 미분양 사태 발생
- 코리아신탁의 '안산 천년가 리더스카이(449가구)', 한국토지신탁의 '동해 코아루 더 스카이(500가구)' 등도 연이어 미분양 사태를 빚으며, 8월에 청약을 진행한 신탁사들의 사업지들 대부분의 평균 경쟁률이 0.2대 1의 수준에 그침

8월 신탁사 분양 현황

신탁사	시공사	사업자명	총 가구	1순위 청약경쟁률
하나자산신탁	두산중공업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2894가구	0.61:1
	경림종합건설	서귀포시 대평 아르테라스	48가구	0.02:1
아시아신탁	우암건설	양평 양수리 더블유캐슬	49가구	0.22:1
코리아신탁	새천년종합건설	안산 천년가 리더스카이	449가구	0.25:1
한국토지신탁	태한건설	문경 점촌 코아루	141가구	2.31:1
	영동건설	동해 코아루 더 스카이	500가구	0.15:1

자료 : 건설경제신문 9/5日字 보도

원인

- 부동산 신탁사 시행 사업지의 미분양 사태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 된 것이지만, 신탁사들의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원인
-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2008년 한차례 진통을 겪은 후 자체 분양 사업 추진시 자체적으로 수차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입지와 주변 시장상황을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몸집을 키워 온 신탁사들은 이 같은 시스템이 없음
- 건설사들이 최근 개발사업에 잘 나서지 않는 것은 개발 사업지의 토지 대부분의 입지가 과거만큼 좋지 않아 시장 상황이 침체되면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란 평가
- 아울러 개발신탁 사업의 경우 신탁사가 설계 및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다 보니, 사업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가 설계상 문제를 지적해도 수용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마케팅 측면외의 전문성도 부족도 드러냄
- 실제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한 '강저 롯데 캐슬아파트'는 12개 동 중 5개동의 주출입구가 지상에 없이 설계되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의 계약해지 요구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SOC예산 축소와 영향

- 8월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SOC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삭감된 17조7000억원 규모에 그침
- 특히, 정부의 2018년 예산총액이 28조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SOC예산은 올해 대비 20%, 4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이어서, 그 동안 국내 고용시장과 더불어 경제성장률을 견인해왔던 건설투자를 급속도로 위축시킬 것으로 내년도 국내건설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2018년 분야별 예산안

구 분	'17년(A)(조원)	'18안(B)(조원)	증감 (B-A)(%)	
◆ 총지출	400.5	429.0	28.4	7.1
1. 보건 · 복지 · 노동	129.5	146.2	16.7	12.9
2. 교육	57.4	64.1	6.7	11.7
3. 문화 · 체육 · 관광	6.9	6.3	△0.6	△8.2
4. 환경	6.9	6.8	△0.1	△2.0
5. R&D	19.5	19.6	0.1	0.9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6.0	15.9	△0.1	△0.7
7. SOC	22.1	17.7	△4.4	△20.0
8. 농림 · 수산 · 식품	19.6	19.6	0.02	0.1
9. 국방	40.3	43.1	2.8	6.9
10. 외교 · 통일	4.6	4.8	0.2	5.2
11. 공공질서 · 안전	18.1	18.9	0.8	4.2
12. 일반 · 지방행정	63.3	69.6	6.3	10.0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분야 재원배분 계획

구분	'17	'18	'19	'20	'21	'17~'21연평균
SOC 분야	22.1(△6.6)	17.7(△20.0)	17.0(△4.0)	16.5(△2.9)	16.2(△1.8)	△7.5



범건설업계 차원의 정부 SOC예산 정책 변화 호소

- 8월31일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인 공학한림원과 토목학회와 건축학회, 교통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회의를 열고 SOC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역시 미래 국가비전을 담아낼 지역발전 및 국토인프라 관련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
- 이들 학회는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철도, 마시는 물, 홍수·지진 예방 등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SOC이며, SOC와 복지를 대척점으로 보는 정부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9월 중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정치권을 상대로 SOC 투자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전망

SOC 예산 축소로 건설시장 위축 전망에도 일자리 창출 독려하는 정부

- 최근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 삭감 정책으로 인해 건설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통해 건설사들의 신규 인력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상호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
- 최근 일부 건설사들은 내년 SOC 예산의 큰 폭 삭감과 민간 주택건설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난에 대비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입찰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어 업계 부담 가중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만 29세 이하 신규 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 철도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함께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이 적용된 철도공사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기술자 배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고, 조달청도 건설사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에 따라 입찰 때 가·감점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과 조달청의 이 같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건설산업 양질 일자리 전환)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른 공공 발주기관들로 적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